

## 언론동향(12. 3.)

### 《언론보도 목차》

1. (KBS 뉴스) 통일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북단체 사무검사 재개“표적검사 아냐” …… 2
2. (문화일보) 국방부, ‘DMZ 내 유해발굴’기획홍보물 ‘광고대상’ 수상 …… 3
3. (인천일보) ‘접경지역 인강경 광역연합’ 에 주목한다 …………… 4
4. (NSP통신) [기고] 양서경의 추상에세이, 남DMZ 15년의 기억’-희망의 DMZ …… (별첨)

## 통일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북단체 사무검사 재개...“표적검사 아냐”

입력 2021.12.02 (11:53) | 수정 2021.12.02 (12:00)

0 0 <



통일부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중단했던 대북단체 사무검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소관 단체 총 433개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사무검사 대상 단체 109개 선정했다. 이 가운데 72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검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40여 개가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이후부터 코로나19가 악화되어서 사무검사를 중단했다가 11월부터 나머지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 재개를 위한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탈북민단체나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표적 검사가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검사 대상 단체는 통일부 소관 법인에 대한 전수 평가를 토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정했고, 대상 중 탈북민이 대표인 단체는 109개 중 26개에 불과하다. 검사 대상 단체들을 분야별로 나누면 통일정책, 교류협력, 인도협력, 탈북민정착지원 등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검사 일정도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동의 하에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된 이후 등록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부터 총 433개 법인 중 109개를 선정해 사무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국방부, 'DMZ 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 '광고대상' 수상



열차 출발 안내					
승차준비 출발시간	열차종류	열차번호	도착역	타는곳	지연
● 06:25	DMZ	1950	고향	0	70년
20:19	KTX 산천	175	순천	1	0분
20:23	새마을	1153	익산	7	0분
20:30	ITX 청춘	2021	춘천	1	0분
20:39	KTX 산천	197	광주송정	9	0분
20:52	KTX	316	익산	4	0분

▲ '대한민국 광고 대상' 공공광고 중앙부처 부문 1위인 특별상을 수상한 국방부의 'DMZ 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 기차 종류는 'DMZ', 열차 번호는 '1950호', 출발시간은 전쟁 발발일을 상징하는 '06:25'였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중앙부처 부문 특별상(1위) 수상은 처음”

국방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3주년을 계기로 제작한 'DMZ 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 (영상)이 '대한민국 광고 대상' 공공광고 중앙부처 부문 특별상(1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홍보물은 70년이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12만2000여 명의 6·25 전사자와 이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 묻혀 있는 전사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추석 연휴 서울역에서 현장 캠페인 형태로 관련 행사도 진행됐다.

서울역사 내 전광판에도 '70년째 지연' 중인 고향행 열차를 안내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기차 종류는 'DMZ', 열차 번호는 '1950호', 출발시간은 전쟁 발발일을 상징하는 '06:25'였다. 승차권의 QR코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의 유가족 DNA(유전자) 시료 채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들 홍보물은 150곳의 웹·SNS상에 게재됐고, 100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제작한 영상 광고는 70년간 굳게 닫혀 있던 DMZ의 문을 열어 6·25 전사자들의 귀향 계기를 마련한 9·19 군사합의 의미를 담았다”며 “발굴된 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참여 등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 ‘접경지역 인강경 광역연합’에 주목한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접경지역 인강경 광역연합’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인천-경기-강원 자치단체들이 광역연합을 구성해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광역연합이라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도입해 접경지역의 공동 과제와 미래에 대응하자는 발상이 신선하다.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로 제시된 상호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을 가리키는 접경지역은 법적으로 모두 15개 시군이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김포시과 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다. 1990년대 초 접경지역지원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이들 시군의 읍면동 단위로 접경지역이 설정되었으나, 2020년 법이 바뀌면서 시군 단위로 바뀌었다. 이들 시군에 더해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된 복합형 광역연합이 구성되면, 규모의 경제나 광역적인 행정 대응 체계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접경지역은 분단의 피해를 지정학적으로 감내해온 지역이라 낙후성과 소외

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방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크게 뒤쳐져 있으므로 산업과 경제, 교육 여건 등에서 매우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렇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평균의 77.8% 수준이고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6곳, 주의 지역이 7곳이다. 광역연합은 이러한 구조에 대응하고 벗어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눈여겨 볼만하다. 게다가 접경지역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하고 비무장지대(DMZ) 생태 환경을 보전해 활용해야 한다는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그러나 신선하고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도 높은 건 아니다. 광역연합이라는 아직 낯선 방식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경기 강원 의 접경지역도 각기 여건에 차이가 있다. 세 광역단체와 경기 북부-남부 간 이견 조정도 만만찮은 과제다. 앞으로 제안 내용이 더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